

### 제 1 교시

※ 1번부터 10번까지의 ‘청소년’은 20세 미만의 사람을 뜻합니다. 문제를 잘 읽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1. 다음은 학대 수준의 학습시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내용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

한국은 OECD국가 중 가장 긴 학습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노동을 하루 7시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처럼 ▶학습시간 쪼갬제 ▶야간학습 금지 ▶학원 휴일 휴무제 등 학습시간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 ① 찬성      ② 반대      ③ 관심없음

1-1. ②번을 선택한 경우,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2. 다음은 입시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제안내용 중 후보자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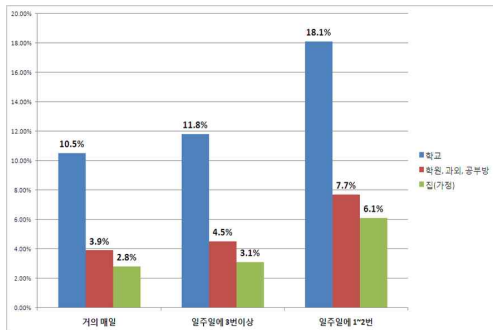
|       |  |
|-------|--|
| 제안 목적 | 입시 압박 축소, 평등한 교육에 대한 권리 보장   |
| 제안 배경 | ‘정유라 대입특혜사건’에 대한 전국민적 분노의 이면에는 살인적인 입시, 학교서열화, 교육을 통한 불평등의 재생산 문제가 있다. |
| 제안 내용 | ㄱ. 특수목적고/자사고 폐지<br>ㄴ. 수학능력시험의 자격고사화<br>ㄷ. 시험 축소                        |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해당없음

2-1. 제안내용 중 반대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그 이유를 각각 서술하시오.

3. 다음은 ‘매맞는’ 시민을 주제로 하는 글과 그래프이다. (나)에서 주장하는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가)



2014년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전국 중고등학생 5,845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 중 절반 가까이가 체벌을 직접 당하거나 목격했고, 언어폭력을 경험했다. 체벌과 언어폭력이 가장 빈번한 장소는 학교였으며, 일주일에 한번 이상 폭력을 경험한 학생도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나) 청소년에 대한 폭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서부터 ‘체벌·언어폭력 프리(free)’ 정책 강화 ▶가해행위자 사법조치 강화 ▶학원 조사감독체계 마련 등 체벌과 언어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 ① 찬성      ② 반대      ③ 관심없음

3-1. ② 또는 ③을 선택한 경우,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단, (가)의 내용을 근거로 포함하시오).

4. 촛불의 주역, 청소년 참정권을 확대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대통령 후보 5명이 모여 토론을 벌였다. 다음 중 후보자의 입장과 같은 입장을 지닌 인물을 모두 고르시오.

- 기호1번 루시우 : 선거든,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소년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기호2번 트레이서 : 정당활동 연령 제한부터 폐지해야죠. 정당 활동에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 기호3번 D.Va : 당선되면 선거권 연령부터 인하하겠습니다!
- 기호4번 젠야타 : 피선거권 연령도 하향해야죠. 청소년 국회의원이 있는 나라! 멋지지 않습니까?
- 기호5번 토르비온 : 안됩니다! 모두 시기상조예요!

- ① 루시우      ② 트레이서      ③ D.Va      ④ 젠야타      ⑤ 토르비온

4-1. ⑤번을 선택한 경우,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5.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5-1. (가)는 일제시대 단발령, (나)는 군사독재시대에 전 국민을 상대로 자행된 두발·복장규제 현장을 기록한 사진이다. 그 유산인 두발·복장규제가 학교현장에서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유무, 교육감의 정책, 관리자의 교육관, 공사립 여부 등 지역·학교별 학생인권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이와 같은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 ① 두발·복장규제 전면 폐지, 학내외 집회·표현의 자유 보장, 인권 침해조사 청구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한 전국적 수준의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한다.
- ② 학생인권 문제는 지역 교육청이 알아서 할 문제다.
- ③ 학교 안의 문제는 학교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

5-2. ② 또는 ③을 선택한 경우, 그 이유를 각각 서술하시오.

6. 다음은 청소년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의 대표적 요구안이다. 아래 요구안 중 후보자의 입장과 동일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오랫동안 불법파견의 온상으로 악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현장실습생의 사고·사망사건마저 잇따르고 있다. 아르바이트에 나선 청소년들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현실도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 ㄱ. 산업체로 파견하는 현장실습을 폐지하라.
- ㄴ. 취업률에 따른 학교 차등지원정책을 폐지하라.
- ㄷ. 최저임금·주휴수당 갈취/폭언·폭행/꺾기' 등을 자행한 사업자의 처벌을 강화하라.
- ㄹ. 공공부문에서부터 양질의 청소년 일자리를 창출하라.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해당없음

6-1. 요구안 내용 중 선택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 이유를 각각 서술하시오.

7. 다음은 청소년 참여기구(예: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의회 등)를 접한 학생이 작성한 메모이다. 메모에서 제시된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고르시오.

— < 보 기 > —

○ 청소년 참여기구의 문제

- 유명무실화 :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영향력이 적다.
- 스펙기구화 : 스펙 쌓기가 목적이 된 본말전도 현상

○ 청소년 참여기구에 필요한 것

- 청소년의 참여권과 결정권을 실질화하는, 청소년참여 확대 정책의 입법이 필요하다.

○ 청소년 참여기구를 위한 정책은 뭐가 있을까?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에 학생도 포함되어야 한다.
- 청소년이 발의한 법률, 정책에 대한 의무적 심의제도를 도입하고 반영해야 한다.
- 청소년참여기구의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① 찬성    ② 반대    ③ 관심없음

8-1. ②번을 선택한 경우,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8. 다음 연설문을 읽고, 후보자의 입장을 고르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후보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폭력 학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경우만 늘어날 뿐, 정작 피해자 지원과 폭력문화에 대한 성찰, 인권평화 역량강화 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해자 낙인찍기가 아닙니

다. 피해자 보호 및 회복조치 강화, 생활기록부 기재 금지, 징벌 위주의 절차에서 회복적 해결 절차로의 전면 전환이며 이를 목표로 학교폭력예방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폭력적인 학교문화와 절차로는 학교폭력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① “말씀하신 바에 대해 찬성합니다.”

② “말씀하신 바에 대해 반대합니다.”

8-1. ②번을 선택한 경우,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9. 아래의 글에서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에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청소년은 대표적인 경제적 약자입니다. 보호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보니 학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빈손으로 탈출한 경우 또 다른 위험상황에 내몰립니다. 지난해 11월, 우리 운동본부가 청소년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6.1%의 청소년이 1순위로 바라는 사회정책으로 기본소득 보장을 꼽기도 했습니다. 기본소득의 즉각 실현 가능 여부를 떠나 청소년도 기본소득(시민배당)에서 예외가 되어선 안됩니다.

① 동의한다    ② 동의하지 않는다

9-1. ②를 선택한 경우,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10. 다음은 대통령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욱우당 씨의 정책 공약집에서 발췌한 것이다. 욱우당 씨는 청소년의 법적 방어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나, 아래와 같이 자료 일부가 훼손되어 그 내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욱우당 씨의 입장이 후보자와 같다고 가정할 때, 훼손된 부분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인지 모두 고르시오.

[욕우당의 약속] 청소년의 법적 방어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보호자의 일방적 합의 강요로 소송을 포기하는 일, 보호자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피해신고를 포기하는 일, 보호자의 반대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일, 보호자동의서를 받지 못해 비공식노동으로 내몰리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저는 아래의 정책을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1. 인권침해조사, 형사사법절차, 근로계약서 등에서.... (훼손)
2. 법률대리인 지원제도 강화

① 보호자가 아닌, 신뢰관계에 있는 보조인을 지정하여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② 욱우당의 입장과 다름

10-1. ②번을 선택한 경우,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 확인 사항

- 문제지의 해당란에 내용을 성실하게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